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성장과정과 그 쇠퇴요인 일고찰

정 주 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조선초기 정부의 억상책과 개성상인의 딜레마 | 참고문헌 |
| 3.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성장과 자본축적과정 | Abstract |
| 4. 개항기 개성상인의 쇠퇴요인 | |

Key words(중심용어): 조선왕조(조선정부)Choson Dynasty(Choson government), 개성상인(Kaesong merchants), 유교이념(Confucianism ideology), 억상책(National isolation policy), 쇄국정책(Restraining merchant policy), 조선후기(Latter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논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상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변화가 개성상인들의 존립과 쇠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성장 및 쇠퇴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연구의 범위를 조선전기 및 후기, 그리고 개항기로 편의상 분류하고 이를 각 장에 나눠 논의를 기술하나, 그 본래는 조선후기와 개항기의 개성상인의 성장과 쇠퇴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그 초점을 둔다.

결국, 조선정부가 유교이념을 내세우며 무분억말의 억상책을 고수하면서 개성상인에 대한 탄압으로 개성상인이 시련에 직면하였으나, 그 이후 정부의 무분모랄론적 상업관의 대두와 그로인한 개성상인의 상업적 기반이 막대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데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개성상인의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된 것이다.

요컨대 조선정부의 쇄국정책과 상무역 인식의 부재로 외세에 의한 자본주의 침투를 초래케 된 점은 정부정책의 운용이 국가의 운명과 국내의 상거래에 중대하게 미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었다.

I. 서 론

이 연구의 논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가 상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변화가 개성상인들의 존립과 쇠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성장 및 쇠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으로는 중세적 지배체제로 볼 수 있는 조선왕조의 사·농·공·상으로 구분된, 뚜렷한 조선의 계층적 통치를 들 수 있다. 조선조는 대체로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였다. 그에 따라 농업 외에 상공업에 별다른 관심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양반을 지주층으로 하는 유교 및 성리학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함몰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쇄국주의정책¹⁾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아울러 조선은 피지배층인 공장에서 재부의 생성을 억제하는 억상책²⁾ 실시로 일관된 왕조체제였다.

이처럼 조선시기 중농억상관은 유교이념에 그대로 투영된 이데올로기로 상업을 가업으로 하는 개성인에게는 상충되는 지배논리였다. 조선전기에 성리학적 직업관은 四民(사·농·공·상)만을 천직으로 인식³⁾한 바, 농업을 본(本)으로 보아 중시하고 상업을 말(末)로 보아 억제하자는(이를테면, 末業, 末作) 사상이었다.⁴⁾ 억상의 중요한 이유는 농업이익이 상업이익보다 박하여 농민이 본업을 버리고 말업인 공장으로 전업하라는 것이다.⁵⁾

이 연구는 장사꾼으로 지칭되는 개성상인이 주로 고려 수도에서 활약했던 만큼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개국되고 그로 인해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함에도 특정지역인 開城을 단위로 한 商人이 전국을 포괄하면서 상행위⁶⁾를 펼칠 수 있었다는 데서 논의의 관점을 찾을 수 있다.

개성상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등 양 시대에 활발히 활동한 商人集團이다. 그들은 양 시대에 각기 두르러지게 번성하고 발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상인은 새롭게 개척된 성도인 한양으로 新首都가 이전하면서 舊首都의 상업전통을 살려내면서 결국은 조선후기에 전국의 상권을 장악하여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과제는 개성 상업과 개성상인의 활동상을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자본축적과정을 알아보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배경적 요인으로 조선초기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 결과로서 개항기의 쇄국정책에 의한 외세의 자본침입으로 개성상인이 쇠퇴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요컨대 개성상인이 조선초기 억상책에 의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맞이했음에도 어떻게 조선후기에는 자본집적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존재해 온 측면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는 동시에, 한편으로 국가적 위기상태인 개항과 더불어 외세에 의한 서세동점으로 개성상인이 쇠퇴를 초래한 점도 또한 연구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개성상인의 존립과 위태로웠던 시기는 결국 조선정부의 성장과 한계에서 오는 반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전기와 개항시기에 개성상인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1) 주로 민간상인이 외국무역을 통한 재부의 축적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이 때문에 국내상업은 화폐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가 침체되었고, 외국과의 무역은 사신무역에 한정되었다. 강만길, “시장과 상인”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1991), 14쪽.

2) 이는 토지를 통한 재부의 소유자와 그 재부를 바탕으로 한 지배계급을 양반지주층에 한정하기 위해 토지가 아닌 다른 상공업분야에서의 재부형성을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3) 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83), 78쪽.

4) 당시 조선초기 정치권력가의 한 사람인 정도전의 상업관도 틀리지 않았다. 그는 <<조선경국전>>에서 상업인 末作을 억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本實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성, “조선초기 상인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 『국사관논총』 제12집 (1990), 3쪽.

5) 이현창, “조선시대 국가의 재분배 기능과 국내상업정책” 『성곡논총』 제27집 2권 (1996), 458쪽.

6) 상행위는 농촌에서 생계가 어려웠던 농민, 즉 피지배층의 도시유입과 대동법실시로 도시의 상권이 확대된 결과이지만, 개성인들은 조선왕조 성립 후 관직에서 소외된 후 식자층까지도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영국, “상공업 발달의 시대적 배경”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1991), 3쪽; 강만길, “시장과 상인,” 20쪽.

맞은 것은 조선초기 정부의 억상론에 의한 것과 더불어 개항시기에 불어 닥친 외세의 개방 압력과 불평등조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개성상인이 본래 개성에 연고가 있었으나, 조선 건국 후 수도 한양으로 이주 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상인으로 발돋움하기까지,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자본축적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개항시기 외세에 의해 쇠퇴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부정책의 변화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연구의 범위를 조선전기 및 후기, 그리고 개항기로 편의상 분류하고 이를 각 장에 나눠 논의를 기술하나, 그 본래는 조선후기와 개항기의 개성상인의 성장과 쇠퇴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그 초점을 둔다. 즉 조선정부의 상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성상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 자본축적과정이 있기 까지 그들의 딜레마를, 궁극적으로는 쇠퇴하기까지의 경제적 환경을 그 근간으로 한다.

다만 개성상인 연구의 초점에서 볼 때 이 연구가 가지는 두드러진 한계는 기존의 연구처럼 개성상인과 경강상인⁷⁾과의 비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성도인 한양의 상인으로서 경상이 지배적 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상인이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경상과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존립하고 또 활동을 펼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상인으로 자리매김한 데서 연구의 가치는 높다하나, 개성상인과 경상의 비교고찰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과제는 왜 개성상인이 성도에 경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다 더 뛰어난 활동으로 전국의 상권을 주무대로 성장하고 급기야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성상인이 조선초기의 어려운 상황, 즉 조선정부의 상업 억제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그다음 개성상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배경적 측면을 알아보고, 또한 조선후기에는 개성상인이 어떻게 경제적 성장과 자본집적을 하였는지를, 마지막으로 개항 시기 개성상인들이 차츰 쇠퇴하게 되는 원인 등을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초기 정부의 억상책과 개성상인의 딜레마

이 장에서는 역성혁명으로 한양에 신수도(新首都)의 성도를 세운 조선왕조가 유교적 이념을 내세우며 장시급업정책 등 억상론으로 상업을 부정하자, 구수도(舊首都)인 개성에서 상업전통을 일궈낸 개성상인의 정부정책과의 딜레마 상태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조선초기 정부 하에서 표출된 양반지배계급과 쇄국정책이 개성상인을 상대로 한 조선정부의 억상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성상인의 딜레마를 적요하고자 한다.

1. 개성상인의 상업적 기반

1) 개성과 개성상인

조선왕조는 역성혁명이라는 방식으로 개창되었기 때문에 정복왕조와 달리 시전이나 관아건

7) 경강상인이란 한양이라는 수도권 내의 한강변에 근거를 둔 상인군을 의미한다. 주로 이들은 정부의 세곡을 운입하거나 선박을 이용하는 상업, 즉 선상에 종사하거나 각종 상업을 영위하던 상인이다. 주로 경강상인, 강상, 경강선인, 경강인으로 호칭된다. 강만길, “경강상인연구” 『아세아연구』 제14권 제2호 (1971), 23쪽.

물 등 개성의 도시적 기반은 대부분 온존할 수 있었다. 500년 동안 정치·경제·행정·국방 등의 주요 기능이 도성에 집중되는 왕도로서 번성했듯이, 당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더라도 개성의 도시기반시설은 조선시대 어느 도시와 다른 특성을 갖는 도시로서 기능하게 했다.⁸⁾

이처럼 도성이었던 개성은 고려조 500여 년 동안 國內外貿易의 求心地 역할을 수행하면서 최대의 商業都市로 번성하던 곳이었다. 13세기 전반 호수가 10만에 이른다고 운위되고, 또 도성에서 국내외 교역을 위한 商船들이 모여드는 예성강까지 가옥이 상접할 정도였다고 할 만큼 전성기 개성의 모습은 바로 상업도시로서 번성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호수가 10만에 이른다던 개성인구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건국과 함께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 크게 격감하였다. 주요 통치기능이 도성에 집중되는 집권국가의 특성상 천도에 따른 개성의 인구감소는 불가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3만 여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던 개성은 여타의 지방도시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여 도성인 한양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개성은 원래 有田者가 적지만, 간혹 數頃의 田地를 가진 者까지도 사람을 사서 토지를 경작시키고 자신은 성내에서 상업에 전념한다는 정도였다. 개성인들이 본디 농업에 힘쓰지 않고 상업에 專業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정⁹⁾은 당시 널리 알려진 바였다. 그리고 개성의 활동무대는 시전¹⁰⁾을 중심으로 한 개성에 그치지 않고 行商活動을 통해 전국을 그들의 상권으로 하고 있었다.¹¹⁾

개성의 시전상업이 한양의 그것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이 발달하고 있었지만, 本領은 국내 상업계를 연결하는 행상활동에 있었다. 이처럼 개성상인이 상업에 많이 투신하게 된 원인은, 첫째, 그곳이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서쪽으로 중국무역과 연결될 수 있었던 점, 둘째, 조선왕조 건국 후 개성인들은 이에 不服하였으므로 조선왕조 당국에서도 이들을 등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 곳 士大夫의 후예들이 학문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한 점 등에 있다.¹²⁾

확실히 개성은 중국의 물산이 서울로 반입되는 길목에 있어서 상업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고려왕조의 遺民으로서 조선왕조와 타협하지 않고 생활로를 상업부문에 개척하였기 때문에 그곳이 새수도인 한양과 함께 조선시대 최대의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왕조 정부가 以前王朝의 수도인 개성의 시전을 폐쇄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왕조가 성립되어 수도가 漢陽으로 옮겨지고, 한양에서 시전이 설치됨과 동시에 개성의 시전은 한 때 폐지시킬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개성시전의 영업을 중지하였으므로 미곡을 비롯한 여러 상품의 유통이 끊어졌고, 이 때문에 돈이 많은 상인들은 물건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쌀값이 뛰고 인구가 날로 줄어든다는 개성 留後가 그것이

8)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2001, 봄), 209쪽.

9) 흔히 開城商人의 精神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남의 돈으로 사업하지 않고,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해 그 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장사꾼은 목에 같이 들어와도 신용을 지키며, 자식이라도 능력이 모자라면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그리고 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10) 시전은 정부에 대한 국역부담의 대가로 특권을 부여받고 평시서(平市署), 즉 시전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市案에 등록된 어용상인 단체를 말한다. 즉 시전은 국가가 건물을 지어 상인에게 대여한 가게이며, 생필품을 조달하는 기관이자,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국고잉여품을 처분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변광석, “18세기 평시서의 시전운영과 시전체계의 변질” 『부대사학』 제17집 (1993), 399쪽; 박평식, “조선초기 시전의 성립과 ‘금난’문제” 『한국사연구』 제93집 (1996), 55쪽.

11) 박평식,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998), 192-193쪽.

12) 李瀾, 『星湖僿說』 「人事門」 生財條.

었다. 그러나 새로운 수도의 건설에 따라 이전왕조의 수도인 개성의 격을 떨어뜨리려 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리라는 추측이다.

2) 사대전 제도의 존재

서울의 六矣廩¹³⁾과 비교할 만한 것으로 개성에는 四大廩¹⁴⁾이 있었다. 즉 개성의 사대전은 契조직의 시전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네 개의 시전을 의미한다. 이 사대전이 어떤 종류의 시전으로 구성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육의전의 경우와 같이 시전 중에는 白紬廩 등이 있었고, 이것을 미뤄보아 사대전 제도가 개항 직전까지 존재하였을 것이다. 여하튼 개성의 일반 시전과 사대전도 한양의 육의전 및 기타 시전과 같이 官府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지고, 그 대신 관부로부터 禁難廩權과 같은 특권과 官錢貸下와 같은 특혜를 받고 있었다. 개성시전 특히 사대전은 한양시전과 같이 의무적으로 관부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1855년이면 한양시전의 경우 육의전 이외의 시전은 통공정책으로 법적으로 禁難廩權을 상실한 이후였고, 이 때문에 사상도고의 성장이 현저해 가던 시기였다. 개성의 경우에도 사상도고가 성장하여 시전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었다.

한편 개성시전 문제 중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사대전이 그들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 관부에 대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회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이 四大廩會議¹⁵⁾가 점차 사대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성상업계 내지 개성상인의 상행위 전체에 관한 문제를 관부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대전회의는 개성상인 분류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외지행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개입하여 그들의 이익을 옹호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를 통해 개성상인이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사대전회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 조선초기 정부의 억상책

1) 쇄국주의정책의 유지

일 국가의 대외정책에서 쇄국정책을 쓰는 경우, 그 목적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막아 정치·경제적인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회가 안고 있는 脆弱性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적으로는 국제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국가가 쇄국주의를 고수하려면 최소한 경제의 자급자족과 독자적 방위력이 요청될 때의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반면 주변국가와의 통상 당시 조선은 타국과의 인접에서 국제적 관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정부가 쇄국정

13) 六矣廩은 관설 점포를 상인에 임대한 시전이 확대된 것으로, 비단을 파는 線廩, 무명을 파는 綿布廩, 명주를 파는 綿紬廩, 모시를 파는 苧布廩, 종이를 파는 紙廩, 어물을 파는 魚物廩 등을 의미한다. 즉 특정된 상품을 독점해서 팔수있는 특권을 얻는 대신에 관부의 수요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를 갖는 御用商이었다.

14) 四大廩은 비단을 파는 縑廩, 무명을 취급하는 白木廩, 중국산 면포를 파는 靑布廩, 어물과 과일류를 판매하는 魚果廩 등을 의미한다.

15) 이 회의체는 사대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성상업계 내지는 개성상인의 상행위 전체에 관한 문제를 관부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처리하는 기구였다. 특히 개성상인이 외지 행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도 개입하여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회의체였다.

책으로 일관하려 한 것은 역사적 퇴보를 가져온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왕조에 의한 쇄국주의 정책의 결과 대외무역이나 국내 상행위조차 제한되면서 국가의 궁핍의 정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즉 조선왕조가 쇄국주의 정책을 유지한 결과 대외무역이나 국내 상행위조차 제한되면서 국가의 궁핍의 정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상업행위의 억제와 인신적 통제

조선초기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맹자의 重義輕利 사상을 수용하여 務農과 節用을 경제운영의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경제사상에 입각하여 조선왕조는 상업을 억제하고, 사치를 금지하며, 國用을 절감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조선초기 理財의 추구를 경제한 抑末論적 商業觀은 仁義를 저해하고 농민과 농촌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상업행위를 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抑末論적 상업정책은 상품유통에 대한 통제보다는 상인에 대한 인신적 통제를 기본으로 삼은 것이었다. 시전상인들은 국가에 대해 人頭稅 형식으로 부과된 坐賈稅를 시전행랑 사용의 대가로 부담하였고, 반면에 이러한 부담을 대가로 국가에서 건설할 행랑을 사용은 물론 물품판매의 독점권을 보장받았다. 또한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던 行商이나 船商들은 路引을 발급받아 장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 상인에 대한 인신적 통제정책은 경제영역 전반에 걸쳐 국가가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貨權在上論과 상품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이권을 국가, 군주가 장악, 관리하는 利權在上論에 기초하여 시행된 것이었다.¹⁶⁾

3) 금난전권의 유지

주지하듯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도시의 시전상업을 황폐화시켰다. 이 양난으로 파괴된 시전을 복구하고 육성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였으며, 이것이 금난전권을 성립시킨 간접적인 계기였던 것이다. 후에 正祖는 亂塵의 폐단에 따른 물가를 등귀시킴으로써 서울의 貧士와 窮民의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금난전권 성립의 보다 직접적 계기는 國役負擔의 증가와 그에 대한 보상책이었다. 대동법이 시행되어 시전이 공물 납부의 일익을 담당하고 청나라에 보내는 方物과 歲幣를 분담하게 되면서 시전의 국역부담은 급증하였다. 요컨대 금난전권의 성립은 조선전기부터 추구되어 온 시민의 육성책과 양난 이후 불가피해진 국역부담책이 결합된 산물이었다.

4) 건국 후 개경시전 정비와 도성 중심의 상업 재편

건국 후 개경 市廛의 정비는 전조의 지배세력이 지니고 있던 사적인 경제기반을 제거하여 새로운 왕조의 통치기반을 안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고려말기 시전을 비롯한 都城商業이 왕실·권세가·사원 등 特權勢力은 재산증대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재편과 정비는 결과적으로 고려지배층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도성상업에 대한 정부의 公的 支配力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였다.¹⁷⁾ 이처럼 고려조에 조성된 시전에 기반하면서도 이에 대한 국가의 관장과 파악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그 정비가 추진되고 있던 개성상업은, 이후 한양으로 천도가 이루어지면서 그해 萎縮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태조 3년

16) 고동환,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안동사학』 제9,10집 (2005), 400쪽.

17) 박평식,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998), 117쪽.

(1394)의 한양천도 결정과 그 단행은 高麗이래 도성으로서 개성상업이 누려 왔던 전국상업에서의 求心역할에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朝鮮전기 開城은 도성인 漢陽과 더불어 주요한 商業都市였고, 개성상인 또한 경상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행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개성의 주요 상업도시로서의 위치는 이미 고려시대에 갖추어진 것으로 조선 건국초기 까지 개성은 國內外貿易에 있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漢陽遷都가 실시됨에 따라 도성중심의 상권개편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유교적 이념에 따라 강력한 상업통제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개성상업은 일시적인 타격을 입었다.

3. 개성상인의 딜레마

1) 장시를 용인한 정부의 務本補末論적 상업관 전환에 따른 문제

앞서 조선정부의 抑末論적 商業觀¹⁸⁾은 15세기 후반 이후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 16세기에 전국에 이르는 장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務本補末論적 상업관¹⁹⁾으로 전환되었다.²⁰⁾ 정부는 처음 장시금압정책을 펼쳤지만, 지주제의 발달로 농민층 분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 하층농민층의 재생산기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장시가 농민층의 재생산기반에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장시를 용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무분보말론은 상업이윤을 국가에 집중하여 피폐된 국가를 再造할 자원으로 삼고자 한 조선정부의 사상인 것이다.²¹⁾ 이 정책은 따라서 상업이 농민의 경리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國富를 증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가가 상업의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상업관이었다. 이 상업관은 16세기 후반에 대두하였지만, 국가운영의 경제론으로 확산한 직접적인 계기는 壬亂이었다. 17세기 전반의 무분보말자들은 농업에서의 상업적 영농의 확대, 소금·산삼·은광개발 등과 같은 산천의 이익을 개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운송수단인 선박과 수레의 개선과 제조이용, 새로운 금속화폐의 주조와 유통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전란으로 파괴된 농업생산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농업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농업외의 다양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민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무분보말론적 상업관은 농업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성상업의 효용성을 긍정한 것이지, 重義輕利사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성상인의 私利를 추구하는 경제적 동기를 긍정하는 상업론은 아니었다.²²⁾ 더구나 조선정부의 상업정책이 억말론에서 보말론으로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행상을 기반으로 한 개성상인으로서의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2) 금난전권 실패에서 오는 불안

17세기 중엽에는 금난전권이 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 17세기 후반부터 금난전권이 강화되었지만, 1706년 이후에야 시전의 독점적 관할 물종이 상세히 구분되었다. 결국 금난전권이

18) 이는 仁義를저해하고 농민과 농촌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상업행위를 억제하자는 상업관이다.

19) 이는 상업이 농민의 경리로 보완하고 국부를 증진시키는 요소로 상업의 효용성을 긍정하는 상업관이다.

20)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제57집 (1987) 참조.

21)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사연구: 상업론·상업정책』 (혜안, 2000) 참조.

22) 고동환,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안동사학』 제9-10집 (2005), 399-401쪽.

강화되면서 시전의 수가 증가하고 관할 물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다. 이 금난전권이 범위를 확대하고 경직적으로 행사됨에 따라 도시 시장의 수급기능을 저해하게 되자, 17세기 후반부터 국역을 부담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면 금난전권은 유지하나 소민생활 안정을 위해 그 경직성을 완화하고 범위를 축소시켜 갔다. 정부의 정책혼선은 단면적으로 금난전권을 유지하면 수도 안의 인민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되고, 그것을 금지하면 시전상인이 직업을 잃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는 규모가 작고 긴요하지 않는 물종에 대해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蔡濟恭이 신해통공을 주장하며 내세운 정책이념, 즉 도고의 규제를 통한 물자수급의 원활화와 그에 따른 물가의 안정과 小民들의 생활보호가 우선이었기에 정부는 금난전권을 우선적으로 철폐하였다. 그로인해 개성상인은 정부의 금난전권 실패와 부작용으로 경제활동에 위축을 초래함은 물론 정부가 오히려 경강상인에 대한 배려로 상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부가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통공발매책²³⁾을 추진한 것은 시전상인에 의한 물가조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에 개성상인이 미곡을 매점하여 물가를 조종하는 것을 규제한 것이었다.

3) 반조선왕조적 기질로서의 특징

개성 출신자는 반조선왕조적 기질 때문에 사대부 계급이라도 관도에의 진출을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 국내의 어느 상인층보다 지식을 갖춘 수준 높은 상인이었으며, 그러므로 자연히 상술이 뛰어났고 따라서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²⁴⁾ 그러나 한편, 반조선왕조적 기질을 들지 않더라도 개성인들은 고려시대를 통하여 활발히 해외무역을 벌였던 고려상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상인의 후예였다. 이들은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 쇄국주의정책 때문에 민간인의 해외무역이 불가능하게 되자 국내의 전체 상업계를 장악하는 商人群이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개성인들이 대부분 행상에 종사하게 된 원인이야, 다른 지방인과 달리 儒生이라도 비교적 쉽게 상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²⁵⁾

4) 개성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의 배제문제

개성상인은 고려시대에 꾸준히 성장하였지만, 조선 전기에는 鎖國主義政策과 역상책으로 外國貿易의 일체 금지는 물론 민간상인들의 국내 상업 또한 위축되었다. 그러나 개성상인은 외국무역활동은 금지되었지만, 국내 상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활동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성사람들의 進出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상업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하튼 조선시대에는 이씨 정권에 반대하는 개성상인은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상업에만 열중하였다.

23) 1791년 신해통공 조치에 의하여 통공발매책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후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어 시전을 정점으로 한 유통체계는 붕괴되었다.

24) 강만길, 『이조의 상인』 (한국일보사 춘추문고, 1975), 91쪽.

25) 위의 책.

Ⅲ.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성장과 자본축적과정

이 장에서는 개성상인의 성장과 자본축적과정을 조선정부의 강력한 기반이었던 채국주의 및 역상책 등이 유연해진 결과 나타나는 상업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보고자 한다. 특히 한편으로는 개성상인이 구수도의 상업전통을 내세워 전국의 상권과 대외무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은 물론 그 자본축적의 과정을, 다른 편에서는 조선정부가 임란이후 식량난 해결에 나서면서 다진 중국 및 일본과의 밀무역을 통한 민간무역확대 등을 담아내고자 한다.

1. 상업정책의 특징

상업정책은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상업에 대하여 행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 상업정책의 기본이념은 국가가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의 원활한 需給과 가격안정을 이루어 백성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고유의 상업인 상품유통업은 활동범위에 따라 내국상업과 외국상업(무역)으로 나누어지므로, 상업정책도 그 구분에서 대내 상업정책과 대외상업정책으로 나누어진다. 현재는 상업정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내 상업정책만을 말하며, 대외 상업정책은 무역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국가의 기본적 경제기능은 국가의 물적 기반의 확보를 위한 잉여의 흡수, 그리고 기초적인 소비생활의 보장과 농가의 재생산의 지원을 위한 재분배였는데, 시장의 성장에 수반하여 잉여의 흡수와 재분배는 시장에 의존해 갔다. 大同法은 잉여 흡수의 시장에 대한 의존의 진전을 보여준다면, 減價發賣의 확대는 잉여의 재분배의 그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잉여의 흡수와 재분배를 시장에 의존하는 정책은 역으로 市場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²⁶⁾ 환곡과 진휼의 정책이 국가의 재분배기능을 통하여 소비생활의 안정과 농가의 재생산의 유지를 도모하였다면, 상업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의 재분배기능만으로 모든 경제활동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국가의 재분배기능만으로 비농업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경제생활을 결코 보장할 수 없었다.

조선 초부터 한성의 상업 활동 자체는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되었다. 조선시대의 지배세력들은 重農抑商策을 표방하였지만, 시장기능은 국가의 재분배로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시장기능을 애초부터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촌생활에서는 상업의 필요성이 작았지만, 개별 농가는 완전히 자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도 농가의 재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조달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었고, 그러한 영역을 시장에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경제통합기능의 한계영역에서 시장이 성장·확장되면서 그것을 보완하였다. 국가가 抑商觀에도 불구하고 시장교환의 존립과 확대를 용인한 것은 그것이 국가의 재분배기능을 보완하여 인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²⁷⁾

2. 개성상인의 성장배경

1) 개성인이 갖고 있던 고려 이래의 상업적 전통

고려 이래의 商業傳統은 것처럼 단기간에 단절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조선정부 역시 개

26) 이현창, “조선시대 국가의 재분배기능과 국내상업정책” 『성곡논총』 제27집 2권 (1996), 471쪽.

27) 위의 논문.

성상업이 국내외 교역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중과 역할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개성 시전의 개시를 금지하고 상인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이 실시된 지 불과 몇 년 만인 태종 9년(1409) 3월에 이르러 개성 ‘유후’의 건의에 따라 한양으로 이주되었다가 자의로 개성으로 돌아간 부상대고만 다시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 외 개성 시전의 開市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태종 9년 3월 개성의 開市가 허용되자 한양 이주 대상이 아닌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성 시전은 이내 복구되었다. 국초 조선 정부의 개시금지로 인한 일시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개성에 시전이 이내 복구 되고 상업도시로서의 면모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반은 물론 개성인 갖고 있던 고려 이래의 상업전통에 있었다.²⁸⁾ 따라서 왕조의 교체와 그에 이은 천도, 조선초기 정부의 상업정책이 이러한 개성 상업에 일시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고려시대 이래의 전통을 잇고 있던 개성상인들에 의해 개성상업은 곧바로 복구되고 발전되어 갔던 것이다. 특히 천도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또는 상업이윤을 추구하여 한양으로 이주하였던 개성상인들 중의 일부는 여전히 개성에 그들의 상업적인 근거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초기 개성상업의 복구와 발전에 이들 개성출신 도성상인들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이다.

2) 官貿易의 한계에 의한 활동여지

高麗時代에는 民間人의 海外貿易이 盛行하였고, 開城商人이 그 中心이었다. 그러나 朝鮮時代에 이르러서 민간인의 해외무역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따라서 외국과의 교역도 명나라와의 왜관무역 등 일종의 官貿易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官貿易을 통하여 輸入되는 外國商品이 조선왕조정부의 수요를 충족하고 남으면 한양시전인 및 개성상인 등 일부 상인들에게 판매되는 것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442년에도 중국사신이 가져온 물품이 너무 많아서 관부에서 이를 모두 매수할 수 없었으므로, 만성부와 開城府의 부상들에게 교역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기한 내에 교역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여타의 상인으로 하여금 무역하게 하고 있다.²⁹⁾ 조선 初期에는 개성상인의 직접적인 외국무역활동은 끊어지고 사행무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왜국무역과 연결될 뿐이었다. 그러나 왕조의 중기이후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활발한 활동력과 투철한 이익에 의하여 정부통제하의 官貿易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시장과 접근되어 갔고, 마침내는 직접적인 外國貿易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3) 개성이 상업도시로서의 기반 유지

첫째, 개성이 특별히 商人들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땅은 좁고 백성은 많아서 농사만으로 살기 힘든 점도 그 한 이유가 되고 있었다.³⁰⁾ 따라서 일반적인 작물로는 땅이 狹小한 개성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家蓼의 경우는 1천평 내외의 면적 정도, 혹은 그 이하의 면적으로도 충분했고, 또 水田이 아닌 山麓 등의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었다. 이 작물들은 위험률이 높기는 했지만 수확만 하면 큰 이익이 보장되는 商業作物이었다. 그러므로 行商하는 개성상인들이 歸郷하여 安着하려고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작물은 없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개성지방에서 人蓼耕作이 급격히 확대되어 인삼의 主產地로 등장하게 되는 데는

28) 박평식,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998), 189쪽.

29) 강만길, “개성상인연구,” 『한국사연구』 (1972), 20쪽.

30) 『松都志』(1648) 土俗, “民多田小 一人所耕 不過一日”

이러한 개성상인들의 힘든 상업활동과 家蓼栽培의 特殊性이 결합된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³¹⁾

둘째, 개성상인은 고려시대 이후 줄곧 이 땅에서 상업 유통업계를 장악한 상인집단이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이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권을 장악하는데 유리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사신의 왕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부무역(公貿易)과 외국상인들에 의한 민간무역(私貿易)을 하였다. 개성 근처 예성강하구의 벽란도는 국제무역항으로 구실을 하였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商業都市로 발전하였다.

셋째, 도성중심의 상업재편과 역말을 통한 상업장악을 도모하던 조선정부 또한 또 다른 차지에서 개성의 상공업 도시로서의 성격 유지를 필요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財政運營이나 使臣支待등과 관련된 국가수요의 조달 문제였다. 조선 정부는 상업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국가 需要를 國初이래 市役의 형태로 도성의 시전에게서 우선 공급받고 있었다. 國庫 잉여물자의 처분 또한 이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 시전을 비롯한 도성상업이 국가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물품의 조달과 처분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도성의 시전을 위주로 전국 상업을 파악하려는 상업정책 하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었다. 그런데 재정운영이나 사신지대, 경제정책의 一環으로 제기되던 국가수요 물품의 調達과 剩餘物 처분역할은, 개성의 시전과 상인들 역시 그 한 몫을 떠맡고 있었다. 도성에 시전행랑이 조성되고 市廛體系가 형성된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즉 이는 국가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도성과 함께 개성상업을 이용하는 형태였고, 이는 곧바로 개성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을 維持·保全하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³²⁾

넷째, 개성은 명나라를 왕래하는 兩國 사신들의 주요 經宿 장소였다. 일 년에 네 차례의 정규 使行과 임시로 빈번하게 파견되었던 對明使行은 매번의 使節 구성원이 40여명에 이르렀고, 여기에 국초 이래 수시로 파견되어 온 明 使臣 일행에 이르기까지, 그 접대비용은 이들이 경유하는 해당 지방관아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개성은 이들 양국 사행이 지나가는 주요 경유지이자 숙박지였다.³³⁾ 또는 明 사신이 가지고 오는 물품을 貿易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성의 상업적인 도시 기반은 더욱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市役의 일환으로 개성의 市廛과 富商에게 명나라 사신이 가지고 온 물품을 매입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명 사신과의 공무역에 필요한 저·마포 등을 責辦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국용물자의 확보, 사신의 支持, 그리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연관하여 전개되던 물품의 운용 과정에서도 개성은 상공업도시로서의 효용과 기능을 조선정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었고, 이는 고려 이래의 상업전통과 함께 개성상업이 복구되고 발전해 가는 기반이 되었다.³⁴⁾

4) 양반유자계층의 상업참여

개성상인의 행상활동은 임란 후 국방강화를 위한 조선정부의 방침마저 변질시킬 정도로 성행하였던 것이다. 상공업 도시로 번성하고 있던 개성을 기반으로 하여 펼쳐지던 개성인의 행상활동은 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일부의 業文者를 제외하고는 양반·유자층을 포함한 개성 부민 전체가 行商을 所業으로 한다는 당시의 인식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³⁵⁾ 개성의 상공업

31) 상업활동을 통해 일정 정도의 자본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삼업에 투신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孔應奎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2) 박평식,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998), 196-197쪽.

33) 위의 논문, 197쪽.

34) 위의 논문, 198쪽.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의 하나는 양반유자 계층의 상업참여였다.

개성 유지층의 상업종사는 실제의 인물로도 확인되는 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宣祖代의 韓舜繼였다. 그는 빈궁한 가세 때문에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鑪器 제조기술을 배워 낮에는 開市하고 밤에는 독서를 업으로 삼았던 인물이었다. 그가 만든 유기는 품질이 우수한데다 가격까지 싸서 구매자들이 그에게 몰려 다른 工商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정도였다.³⁵⁾

결국 개성인에 대한 정치적 禁錮 조치와 반조선왕조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개성의 양반·유자·식자층은 儒業만이 아니라 상공업에도 종사하여 경제적인 번영을 이룸으로써 다른 지역과는 독특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개성 시전이 복구되고 상공업 도시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한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이다.³⁷⁾

5) 행상활동을 통한 전국의 상권화

市廛이 복구되고 이를 중심으로, 개성의 상공업이 번성해 가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개성상인이 전국을 商圈으로 하여 벌이는 行商活動과 對外貿易 또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개성인인 행상으로서 전개하는 國內外貿易은 국초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성인들은 轉販 곧 行商을 所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供役마저 항상 사람을 사서 대신시킨다는 정도였다. 일례로 성종 16년(1485) 큰 흉년이 들어 전국의 행상 활동을 금지하였을 때, 개성부 유수 金永濡가 ‘非興販 無以爲生’을 이유로 개성상인의 예외적인 행상 허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개성상인에 대한 行商從事는 국가에 대한 공역을 항상 타인을 사서 대신 시킬 정도로 일반적이었다.

개성인의 行商從事 실태와 그 정도는 16세기에 들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정은 임란 직후 개성상인을 東伍軍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즉 전란을 수습하고 국방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성상인들을 속오군에 편입시켜 군사훈련을 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비변사의 이 건의는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이와 관련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를테면 모두 행상으로 생계를 도모하던 개성인들이 이 조치로 말미암아 행상을 전폐하게 되어 生存의 길이 막힘으로써 民怨이 頗多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선조 39년(1606) 9월에 개성상인의 행상활동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개성상인의 東伍軍³⁸⁾ 편성 문제가 있었는데, 개성의 인민은 속오군³⁹⁾에 편성하더라도 모두 行商行爲를 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위해 잡아둘 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속오군에 편성하는 방침을 확정하고서도 결국은 1인당 매년 米 20두를 수납하는 대신 이들의 군사훈련을 면제해 주었던 것은⁴⁰⁾, 전국을 무대로 개성상인이 활발하게 商業活動을 벌이던 저간의 실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3. 개성상인의 자본축적과정

35) 위의 논문, 201쪽.

36) 위의 논문, 194쪽.

37) 위의 논문, 196쪽.

38) 조선 후기 속오법(東伍法)에 따라 편성한 지방 군대를 의미한다. 속오군의 편제인 속오법은 영장(營將) 통솔 하의 영(營)을 분군 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 영에는 5개 사(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초(哨), 1초는 3기(旗), 1기는 3대(隊), 1대는 화병(火兵) 1명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었다.

3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경주, “조선후기 속오군: 그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70).

40) <宣祖實錄> 卷204, 宣祖 39年 10月. p.270

1) 개성상인의 人蔘栽培

개성상인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인삼을 재배·판매한 일이었다. 인삼의 인공재배에 성공한 시기는 17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는 18세기 후반 이었다. 人蔘栽培의 확대에는 耕作資金의 확보 및 조달이 관건이었다. 당시 조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삼을 대규모로 재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은 開城이었다. 19세기 개성지방에는 開城商人들에 의해서 수도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자본이 집적되어 있었고, 개성상인들은 自然蔘 단계에서부터 인삼무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2) 개성상인의 對外貿易 확대

官貿易의 한계에 의한 사무역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개성상인은 외국무역에 間接적으로나마 간여할 수 있었다. 대개 18세기에는 여러 가지 方法에 의하여 國內사상인의 직접적인 외국무역이 이루어져 갔고, 여기에는 개성상인이 단연코 그 주도권을 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개성상인에 의한 대외무역이 확대된 계기는 임진왜란으로 식량난에 봉착한 정부가 중국과의 개시무역이나 후시무역을 통해, 그리고 일본과는 왜관무역을 통해 밀무역이 행해져 민간무역이 확대된 데 있다.⁴¹⁾

첫째, 18세기 이후 개성상인의 외국무역은 우선 對中國貿易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조선왕조는 16세기말부터 청국과의 사이에 개시무역의 길을 열었으니, 중강개시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곧 밀무역으로서의 후시무역이 성행하였다. 對中國貿易에는 개성상인 이외에 만상이라 불리는 의주상인도 참여하였으며, 개성상인과 의주상인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여서 이들은 사래나 자금관계에 있어 깊이 결탁되어 있었다. 개성상인의 대중국수출품은 인삼과 함께 皮物類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였으며, 이 때문에 그 들은 국내의 동요생산지에서 피물을 도매하였고, 그것을 직접 중국에 수출하였다.

둘째, 개성상인의 日本側과의 무역도 비교적 활발하였는데, 그것은 인삼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성상인의 대일본 인삼무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1752년 당시 국내에서 가장 品質이 좋은 인삼이었으므로 개성상인과 東萊商人이 이를 모두 獨占하여 팔며, 이 때문에 국내에는 人蔘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18세기 초에는 이미 개성상인의 대일본人蔘輸出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3) 人蔘栽培業과 가공업경영으로의 특징

인삼수출에 의한 축적된 개성상인자본은 단순한 상업자본으로만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경영 등 상업 이외의 전반에 개입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성상인자본은 특히 그들의 人蔘栽培業과 가공업경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왕조후기에 있어서, 개성이 인삼의 인공재배와 그것의 홍삼으로의 가공업 중심지가 된 것은 그곳의 土壤과 氣候가 人蔘栽培에 적당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人蔘이 人工으로 재배되기 前부터 開城商人들이 인삼의 國內外商業의 主導權을 가지고 그것으로 상업자본을 集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개성상인이 인삼무역과 都賣商業을 통하여 集積한 자본이 인삼의 栽培와 加工業에 영입된 것이다.

41) 강만길, “시장과 상인”, 15쪽.

개성인삼의 인삼재배와 그 가공업은 對中國貿易으로서의 포삼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때의 포삼은 자연산이었고, 재배삼이 포삼으로 유통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였다. 自然參으로서 八包로 할 때는 인삼의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은으로써 대신하였는데 인공재배로 인삼의 생산량이 증대함으로써 다시 그것을 팔포에 유통하게 하였던 것이다. 홍삼이 포삼으로 유통되자 그것을 제조 조달하는 紅參제조장이 설립되었다. 개성에는 이 무렵 인삼재배가 성행하였으므로 중포소를 적극 배치하였다.⁴²⁾ 이후부터 개성中包所는 常設化함으로써 개성인삼이 천하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되어서 중국인들도 開城人蔘만을 찾게 된 것이었다.⁴³⁾

여하튼 인삼의 인공재배와 包蔘화, 그리고 包蔘物의 급격한 증대는 개성상인의 자본축적도⁴⁴⁾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개성상인의 인삼재배와 그 가공업의 成長度를 포삼의 증가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비중이 홍삼의 제조와 그 수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인삼을 통한 국제간 중개무역의 활로개척

개성상인은 북으로는 의주상인을 통해 중국과 연결되고, 남으로는 동래상인을 통해 일본을 잇는 국제 중개무역을 펴나갔다.⁴⁵⁾ 특히 중국과 조선정부의 수출물량통제는 밀무역을 성행시키고, 그에 따라 왜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방식은 비합법적인 것으로 물량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국가 간 중개무역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開城商人의 對外國貿易, 특히 인삼무역은 그것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종의 국제간의 중개무역을 이루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요컨대 왕조의 초기에는 개성상인의 외국과의 交易의 길이 막혀 있었으나, 그 후기로 접어들면서 그들의 對中國, 대일본의 길이 열리어 갔고, 인삼, 피물 등이 중심이 된 중국,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개성상인이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의주상인과 동래상인을 조종하는 국내시장과 국외시장과의 조달은 물론, 일본과 청국을 조달하는 국가 간 중개무역을 주도하였던 개성상인의 자본 축적도는 급히 높아간 것이었다.

5) 삼포경영에 대한 투자

개성지방에서는 1810년대 이후 蔘業이 급속히 발달했다. 人蔘主產地化가 진행되면서 개성지방에서 이루어졌던 삼업 발달의 양상을 엿보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개성에서의 삼포경영에 대한 투자는 京商 혹은 譯官들의 투자가 없지 않았지만⁴⁶⁾ 거의 대부분은 개성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개성상인들이 상업작물인 인삼의 재배에 자본을 투자한 이유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수익률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수익의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삼포경영은 큰 이익을 보장하고 있었고⁴⁷⁾

42) 강만길, “개성상인연구,” 『한국사연구』 제8집 (1972), 22쪽.

43) 위의 논문.

44) 18세기 중반이후 인삼의 상품생산과 판로확대는 상업자본의 단계를 벗어나 산업자본화의 모습을 보였다. 이태진, “국제무역의 성행”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1991), 83쪽.

45) 이태진, “국제무역의 성행”, 71-72쪽; 강만길, “시장과 상인”, 21쪽.

46) 19세기 초중반의 사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896년 삼포대장에 의하면 張春化, 金俊行 등의 거주지가 ‘居京’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京商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역관으로는 李琦, 方漢始 등이 역시 같은 자료인 삼포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47) 물론 항상 삼포수입이 좋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병해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 정부 혹은 관속들의 침략 등으로 인한 피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역관과는 홍삼생산액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

그런 만큼 자본의 성장은 가능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 高價의 商業作物로서 인삼재배의 수익이 이려했기 때문에 19세기 내내 삼포경영에 크고 작은 변동은 있었지만, 개성상인들은 삼포에 대해 꾸준히 투자했던 것이다.

6) 松房과 같은 상업망 형성 및 商活動 전개

조선후기 전국에 산재하던 松房은 바로 개성상인의 국내교역을 기반으로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시전상인을 포함한 개성의 富商을 物主로 둔 그들의 差人과 개성상인들이 15세기 중반이후 상업의 발전과 함께 전국에 松房과 같은 상업망을 형성시켜가면서 상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개성상인이 육로를 통한 유통권을 장악한 상인으로 사상세력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송상은 외국무역을 주도하고 전국에 商業組織망을 형성하면서 상업자본을 축적하였다. 이를 기초로 인삼재배와 가공업에 進出하기도 했다. 결국 개성상인이 전국 각지에 松房을 설치하여 주단과 포목 등을 판매하였는데, 조선후기 송방은 보부상의 據點이 되었다. 당시 약 1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성상인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行商을 하였으며, 송방은 정보교환과 상품공급 장소 및 보관소로 이용되었다.

IV. 개항기 개성상인의 쇠퇴요인

개항은 조선정부의 쇄국정책에 반하는 외세에 의한 문호개방 압력과 불평등한 조약체결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조선왕조의 상황대치의 무능과 타개책 미흡으로 국내외 시장과 무역에 취약성을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개성상인의 쇠퇴요인을 몇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다.

1)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시련

인삼의 재배와 가공업을 통하여 축적되어 간 개성상인자본은 開港以後 日本商人資本의 解體作用 때문에 크게 打擊을 받은 것이다.⁴⁸⁾ 전통적인 무역상인의 쇠퇴와 더불어 開港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세력의 대두,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등 외국 상인의 내한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 중 1890년경 약 2600여명의 규모로 면제품과 生活雜貨品을 수입판매 해왔던 중국상인⁴⁹⁾과 쌀과 콩을 수입의 주요인 인삼 및 생활필수품에 까지 깊숙이 거래한 일본상인은 조선의 개성상인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外國資本 流入의 영향으로 개성상인을 비롯한 국내의 상인들은 시련을 겪음과 동시에 포화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기존의 流通經路 또한 새로운 유통경로로 재편성 되는 자연스러운 變化를 겪게 되었다.

조선초기 태종의 역상책으로 국내의 민간상인들의 해외무역을 금지시켜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인삼 무역과 홍삼의 밀무역, 그리고 송방의 활용으로 국내 상업에서 주도권을 장악

에 개성상인과 역관 사이에는 갈등도 적지 않았다.

48) 개항기 무역 및 시장구조의 변화나 외국상인의 침입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현창,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1990); 최성호, “개항기 식민지과정에 있어서의 무역구조 연구” 경남대 경제학 박사논문 (1988);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1985).

49) 한우근, 『韓國 開港期の 商業研究』 (일조각, 1982), 58쪽 참조.

했던 개성상인은 개항이후 하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개성상인의 자본은 개항 전에는 국내 최대의 토착 민간 자본으로 성장하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외국자본의 침입에 대항하는 가장 강한 민간 자본으로 대두하였다. 그러한 다른 상인집단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상인은 외국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나마 개항 후 경강상인 등 포구 주인층은 외래자본에 점차 굴복된 반면 개성상인은 외래자본이 침투하기 어려운 내지유통망을 근거로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외래자본과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성상인의 자본은 외국자본에 의하여 철저히 봉쇄당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인삼의 수출권을 일본인에게 빼앗겨 그 붕괴속도가 더욱 가중 되었다.

특히 개항후 경강상인 등 포구 주인층은 외래자본에 점차 굴복된 반면, 개성상인은 외래자본이 침투하기 어려운 내지유통망을 근거로 자본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외래자본과 끝까지 투쟁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외래자본의 침투로 국내시장이 일본과 중국상인들에게 잠식당할 때, 조선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세력이었던 경강상인들은 대부분 외래자본에 종속되어 기생화한 반면, 가장 마지막까지 외래상업자본과 경쟁을 벌였던 상인세력이 개성상인이었다.⁵⁰⁾

결국 경강상인이 개성상인에 비해 외국자본에 쉽게 굴복하게 된 배경은 조선시대의 금난전권 등 공적인 특권을 누리며 성장하게 된 경강상인과, 금난전권의 폐지와 국내유통망을 배경으로 자본력을 축적하여 성장한 개성상인 간의 근본적 차별에서 찾을 수 있다.

2) 일제의 수탈정책과 상인자본 쇠퇴

1910년대 일제의 조선에 대한 經濟政策의 특징은 우선 무단통치를 배경으로 조선의 경제구조를 식민지 收奪에 적합하도록 재편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아래 개성상인은 그 활동 영역이 크게 위축되어갈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축적은 상당부분 봉건적 권력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과 축적된 貨幣資本이 주로 상인들의 토지 獲得으로 나아가 반봉건적 지주제 경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는 봉건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개성상인은 일제의 지능적 수탈정책에 더욱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조선사회는 봉건적 관계와 자본주의적 관계가 복합되어 있었지만 地主-小作制라는 봉건적 관계가 여전히 지배적이었고 1905년 일본은 조선을 植民地化하는 과정에서 봉건적 생산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식민지 초과 이윤을 얻어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같은 脈絡으로 일제가 개시한 고도로 지능적인 수탈정책은 地主層과 資本家들의 이해와 같이 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외국자본 침투와 봉건 수탈이라는 이중의 압박으로 민중에게 작용하였다.⁵¹⁾ 그에 대응한 개성상인과 경강상인 등이 항쟁을 계속하여 왔지만 민족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간자본, 그리고 상업자본, 그 중 개성상인자본의 확연한 쇠퇴는 조선정부의 채국정책과 역상책에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항이후 국내의 民間資本이 민족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을 의미하는 이러한 상인자본의 쇠퇴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과 운영체계라는 큰 틀과 관련지어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

3) 일제의 개성상인 정신과 자본 말살

帝國主義와 支配層의 수탈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수공업자들도 몰락시키고 말았다.

50)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제54호 (2001, 봄), 219쪽.

51) 이에 관해서는 강만길, 『朝鮮 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대출판부, 1973) 참조.

경강·평양·개성 등지의 大商人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본상인에 맞서거나 생존을 위해 일본상인에 예속되었다. 특히 개항장의 객주조합은 일정액의 세금을 황실에 상납하여 특권을 보장받았지만, 보부상이나 시전상인들은 제국주의 자본에 상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외국상인의 행상이 合法化되고 일본이 갖은 조세를 부과하면서 이들은 거의 해체되고 말았다. 그런데 韓日併합을 통해 조선의 주권을 거머쥔 일본은 가장 먼저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민족자본과 조선의 상인정신 그중에서도 개성상인의 상인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각종 制度와 法令을 동원해서 수탈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일본 帝國主義는 1910년대 식민정책 초기에 가장 먼저 개성상인의 정신과 자본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이는 개성상인의 상인정신과 민족에 또한 뛰어난 商業活動에 대한 두려움의 반증이라 생각할 수 있다. 조선회사령을 공포하고 시장규칙을 제정하여 개성상인의 商業活動을 강력하게 제재하며 개성상인 자본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인삼판매권을 조선총독부의 지휘 하에 몰수, 전매화 하는 방법 등으로 착취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수탈에 대항하여 개성상인은 初心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보부상단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속하여 義理와 信用, 勤儉節約, 相扶相助, 愛國愛族정신을 바탕으로, 무너진 개성상인의 商權回復을 도모하였고, 이는 후일 朝鮮獨立運動에도 관여하여 군자금의 조달 및 운송을 책임지는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수탈과 자본잠식, 그리고 개성상인정신의 말살로 인해,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은 퇴조하기에 이르렀다.

4) 商業資本이 資本主義의 맹아로서의 발전 좌절

도시의 공업과 상업 및 화폐 경제의 발전 등은 封建적 자연 경제가 붕괴하는 단초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업 자본은 자본을 蓄積하면서 자본주의 생산의 發芽를 조장하였다. 상업 자본은 축적된 자본을 직접 상품 생산 과정에 투여하면서 새로운 利潤을 창출해 나갔다. 즉 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자본을 확대 재생산해나갔으며, 이는 生産力의 향상을 통한 근대자본주의 形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층 농민들을 영락화시켜 임노동자를 창출하고, 상인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봉건적 신분 질서의 해체에 기여했으며, 농업과 수공업의 商品生産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는 자본제적 발아를 촉진했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후기 상업 자본의 형성과 성장은 근대자본주의 형성을 위한 歷史적 맹아⁵²⁾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상업 자본은 축적한 자본을 생산 과정에 投與하기 보다는 토지에 투자하여 봉건적 토지 소유에 執着하였으며, 이는 상업 자본이 근대적 산업 자본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 상업자본이 자본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개성상인의 역할은 물론 부재하였으며, 외세의 압력과 집적된 자본의 수탈 등은 개성상인의 존립과 민족자본의 토대를 어렵게 했다.

5) 민족자본 운동 부재

일제는 朝鮮會社令의 공포와 시장규칙의 제정, 서울 장안의 유기전 閉鎖, 토지조사사업, 또한 개

52) 1970년대까지 조선후기사 연구는 자본주의 맹아론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인 발전성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와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상공업 발달은 상업자본의 속성을 지닌 것이지만, 상업자본의 발달에 이러한 맹아적 변화를 보인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영훈,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비판” 『대학』 창간호 (1985); 이태진, “국제무역의 성행”, 64-65쪽.

성상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개성인삼의 自由販賣禁止와 같은 商人資本및 상인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 성장해온 일부 민간자본은 民族資本으로 커나갈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불평등조약에 의해 값싼 외국상품이 들어오고 정부 또한 外勢의존적인 정책을 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한때 광무정권의 殖産興業정책에 힘입어 여러 회사가 설립되고 근대적 생산 공장을 짓는 등 국내산업 발달에 힘쓰기도 하였지만 일본자본과 경쟁하여 이길 수는 없었다. 즉 일제의 수탈에 의한 조선상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여 民族資本끼리 스스로 뭉치기도 하며 더욱 강한 단결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日貨不買運動, 후일 조만식 선생의 주도로 이루어진 朝鮮物産獎勵運動 등도 일제의 수탈 자본에 대항하는 맥락에서 볼 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의 수탈정책과 그에 대응해 투쟁한 開城商人들의 활동은 그들의 반골적인 기질에서 찾을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는 조선후기와 개항초기를 중심으로 하여 개성상인의 성장과 한계를 다루었다. 즉 조선초기 조선왕조의 억상책에 의한 개성상인의 딜레마가 불가피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조선후기에는 개성상인의 성장과 자본축적을 이뤄낸 결과를, 그리고 개항초기 개성상인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 등의 요인을 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초기 정부의 억상책과 개성상인의 딜레마에 관한 것이었다. 개성은 고려 500년의 도성으로 국내무역의 중심지였으나, 성도가 한양으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지배적으로 상권장악을 했던 개성상인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조선정부의 억상책과 쇄국주의정책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에 개성상인은 전통적인 상인정신과 조선정부의 경제실정에 따른 반작용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성장과 자본축적과정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의 억상론에서 무분보말론으로의 상업정책의 전환, 즉 시장의존정책에 따라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자 개성상인은 개성이 상업도시로서 기반유지는 물론 양반유계층의 상업 참여로 전국의 상권화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개성상인은 막대한 자본 확보는 물론 인삼무역을 계기로 대중, 대일무역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인삼재배업과 그 경영, 그리고 국제간 중개무역으로 체계화되면서 개성상인의 자본축적은 심화될 수 있었다.

또한 개항기 개성상인의 쇠퇴는 주변국가의 외부적 환경, 즉 일제의 침탈과 수탈에 기인하였다. 즉 외국자본에 의한 개성상인의 자금과 시장 봉쇄, 상인자본과 민족자본의 말살, 일제의 개성상인 정신 훼손 등이 그것이다. 결국 개성상인의 쇠퇴는 조선정부의 운명과 동시적이었던 데서, 조선정부의 쇄국주의와 억상론에 의해 상행위 억제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정부가 유교이념을 내세우며 무분보말론의 억상책을 고수하면서 개성상인에 대한 탄압으로 개성상인이 시련에 직면하였으나, 정부의 무분보말론적 상업관의 대두와 그로인한 개성상인의 상업적 기반이 막대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데서 정부정책의 변화가 개성상인의 활로를 열어준 셈이 된 것이다. 또한 조선정부의 통공발매론은 시전상인과 사상도고의 독점인 금난전권을 배격하고 소상공인 자유영업을 인정한 데서 정부정책의 전

환이 개성상인에 중요한 경제적 부를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선정부의 쇄국정책과 상무역 인식의 부재로 외세에 의한 자본주의 침투를 초래케 된 점은 정부정책의 운용이 국가의 운명과 국제간 무역진흥에 중대하게 미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이었다.

참 고 문 헌

- 강만길, “시장과 상인”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1991).
- 강만길, “경강상인연구” 『아세아연구』 제14권 제2호 (1971).
- 강만길, 『이조의 상인』 (한국일보사 춘추문고, 1975).
- 강만길, “개성상인연구,” 『한국사연구』 (1972).
- 강만길, 『朝鮮 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대출판부, 1973).
-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2001, 봄).
- 고동환,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안동사학』 제9,10집 (2005).
- 박평식, “조선초기 시전의 성립과 ‘금난’문제” 『한국사연구』 제93집 (1996).
- 박평식, “조선전기의 개성상업과 개성상인” 『한국사연구』 (1998).
- 백승철, 『조선후기 상업사연구: 상업론·상업정책』 (해안, 2000).
- 변광석, “18세기 평시서의 시전운영과 시전체계의 변질” 『부대사학』 제17집 (1993).
- 오 성, “조선초기 상인의 활동에 대한 일고찰” 『국사관논총』 제12집 (1990).
- 이경주, “조선후기 속오군: 그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70).
-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제57집 (1987).
- 이병천, “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1985).
- 이영훈, “조선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비판” 『대학』 창간호 (1985).
- 이태진, “국제무역의 성행”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1991).
- 이현창, “조선시대 국가의 재분배 기능과 국내상업정책” 『성곡논총』 제27집 2권 (1996).
- 이현창,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 박사논문 (1990).
- 최성호, “개항기 식민지과정에 있어서의 무역구조 연구” 경남대 경제학 박사논문 (1988).
- 한영국, “상공업 발달의 시대적 배경”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일조각, 1991).
- 한영우, 『조선전기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1983).
- 한우근, 『韓國 開港期の 商業研究』 (일조각,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Growth and Atrophy of Kaesong Merchants in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Chung, Joo-Shin*

Discussion of this research is to the change of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 have affect on huge effect to the merchants, and to the shift in policy of the government is cause effect with a what kind of the existence and atrophy of Kaesong merchants.

Namely, There is meaning of this research the place where it grasps the interrelation of the growth and its atrophy of Kaesong merchant to the change of the government policy.

It develops this discussion to be, as bias it classifies the scope of research, the growth and atrophy of Kaesong merchant is how developed a discussion puts the focus in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on Dynasty.

After all, Choson government stood a Confucianism idea and adhered a restraining merchant policy is burns the merchants at Kaesong confronted in ordeal, but the change of government policy is operated with the opportunity it will be able to acquire the enormous capital with him it means that has become the commerce base of Kaesong merchant.

Finally, it was to show an instruction that becomes the capitalism permeation due to the outside power in national isolation policy and commercial affairs reverse recognition of the Choson government.

■ 논문접수일 : 2007년 10월 30일, 논문심사일 : 2007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7년 11월 22일